

## “전라선 고속철, 정책적으로 ‘예타’면제 해야”

김희재 의원, “전남 낙후도 16위 최하위 수준”  
“경제성 평가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재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고속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아직도 반쪽짜리 무늬만 KTX인 철도로 남아있다”며, “각종 SOC 사업에서 호남권이 뒤쳐졌던 이유는 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돼 투자를 받지 못하니, 경제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그 결과 호남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70% 이상까지 더 높이거나, 공공재인 철도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건설하자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는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2029년 호남선과 전라선 일 이용객을 각각 2만 4,949명, 1만 4,167명으로 예측했는데, 2019년 코레일 연구원은 3만 1,645명, 2만 1,447명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고속철은 개통전 662만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되고 나니 작년 한해 1,735만명이 이용했고, 고속철이 없는 전라선도 2012년 176만명에서 2019년 6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 뒤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 고속철이 되면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은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호남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를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타 면제가 힘들면, 최소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준비는 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관광산업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꼭 필요하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철도망계획에 반영사례로 호남고속철 1.2단계(0.39, 0.47), 강릉선(0.29), 동탄~세교선(0.52), 교외선(0.66), 보령선(0.39)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재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당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2관왕, 전남 의원 중 유일

김희재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으로서 뽑힌 데 이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년간 국

정감사를 평가·분석해 왔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매년 삼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안전’, ‘서민’,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초선의원 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과 SRT 전라선 운행,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국도개발계획 반영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현안도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2년 동안 수고해 주신 NGO모니터단에게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앞으로로도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김희재 의원, 국회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결의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 촉구 전남·경남 국회의원 13명, 초당적 협력 및 지원 결의



김희재 의원을 비롯한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 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197개국이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부는 COP28 국내 유치

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으며, 한국 개최 결정 후 국내 유치도시를 공모 받아 개최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남도와 전남도, 10개 시·군과 시군민이 하나된 힘으로 COP28 유치를 최초 제안했고, 그 요청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승인된 것”이라며, “남해안 지역민이 요청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계획으로 승인됐는데도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도시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공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OP28의 국내 개최도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금, 후보도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해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지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힘을 모아 COP28을 분산 개최한다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유치는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추진위 구성, 남중권 공동 유치 확정 시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 등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이개호, 박대출, 서삼석, 김태호, 신정훈, 김승남, 하영제, 윤재갑, 소병철, 주철현, 김희재, 서동용, 김원익, 강민국 의원이 동참했다.

#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김희재 의원,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의료기관 신체검사 통해 학대 여부 조사

김희재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신고 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또는 전담공무원이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

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과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순위증거 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재 “여수 국동 도시재생 뉴딜 648억 투입” 대표 국가어항이자 수산업 전진기지 활성화 “기대”

여수 국동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 김희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50억원과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LH의 투자비 286억원 및 지자체 여수시 자체투자비 등 총 648억원이 투입돼 21년부터 5년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된다.

국동항 일대는 우리나라 대표 국가어항이자 수산업의 보고로 1980년대 항만물류의 중심지로 기능을 한 곳이나 여천공단조성으로 지역산업이 제조업중심으로 재편되고 1990년대 어획고의 감소로 배후산업 동반 쇠퇴와 여수교육청, 전남대 국동캠퍼스의 폐쇄·이전이 이어지면서 지역

인구유출과 함께 점차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 지역이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지역 내 재난안전 D등급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봉산시장을 철거하고 LH의 행복주택과 문화 체육시설 등 부족한 기초 생활SOC시설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복지시설 확충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해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창업지원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권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투자로 앞으로 국동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쇠퇴된 지역경제 및 상권에 더 활력이 생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제3차 피해지원금 지급! (11일~)**  
**고용취약·소상공인 396만명 5.6조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 김희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종류에 따라 보수에 차별 존재 '사회복지사 등의 박탈감 해소 및 처우 향상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재 의원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은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달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아직도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재,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김희재 의원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따라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 빠르고 이뤄져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희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발의

### 음주로 면허 취소 3회 이상 면허 취소 '영구 취소'

김희재 의원(여수)은 최근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전년도보다 10.8% 증가해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산을 침범해 치킨 배달하던 자영업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허중식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 김희재, 학동 3공영주차장 건설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36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남 여수시 학동3 공영주차장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시비 부족액 10억 원 중 5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김희재 의원은 12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물에는 지난 2019년까지 8600만원이 기

투자된 상황으로 2020년에 총 25억 1400만 원을 확보했으나, 10억 원의 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과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이 중 5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던 이곳에 주차 전용 건물 1동이 오는 4월에 준공되면 주차면적 108면이 늘어나 이용객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김희재 의원, 1월 5일부터 여천역 KTX 하루 4회 추가 정차



## 상행 2회, 하행 2회 추가 정차로 지역민 편의 증진

지난 1월5일부터 여천역에 KTX 4회가 추가로 정차하게 됐다.

김희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여천역에 정차하는 KTX는 주중 20회, 주말 24회로 하루 8편의 KTX가 여천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으나, 지난 1월5일부터 상행 2회(여천 15:05분, 22:02분 출발 열차), 하행 2회(용산 14:40분 출발, 21:50분 출발 열차)로 늘어 주중 24회, 주말 28회 정차한다.

특히, 그간은 용산~여수엑스포역 전라선 KTX 막차가 여천역을 정차하지 않아, 막차를 탄 사람들은 여수엑스포역에서 여천까지 택시 등 다

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했으나, 이번 추가 정차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김희재 의원은 "그동안 코레일에 여천 지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정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천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일 평균 1,267명이 이용하며 전라선 KTX 개통 이후 연평균 24.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어린이보호구역  
#1단멈춤2쪽저쪽3초동안4고예방  
#대한민국안전하자 #김희재국회의원



[새해 포부] 권오봉 여수시장

“세계섬박람회·여순특별법·COP28 주력”

“3대 중점 시정 현안인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승인,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수 경제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국가산단대개조 11개 우선 사업을 본격화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 재편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소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울촌2산단 내 수소산업 집적화 방안을 강구해 우위를 선점할 예정이다.

경도 개발에 따른 지역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대학교 예

3대 중점 시정 현안 목표 달성 행정력 집중 포스트 코로나·지역경제 활력 선제 대응 총력

너지산업 미래융합학부를 설치해 산단 일자리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

지역 상권에도 온기를 더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수형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고 카드형 섬섬여수페이를 활성화해 지역 소비를 진작한다는 구상이다.

농수산업은 생산을 넘어 가공,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돌산 갯, 옥수수 등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 집중하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관광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한다. 경

도해양관광단지, 화양북합단지 개발 사업 적기 추진과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선소테마정원 등 문화도시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SOC 사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해양관광 도로교통망 핵심인 화태-백야 연륙·연도교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는 각각 국비 285억원과 25억원을 확보해 공정에 속도를 낸다.

또 웅천-소호 교량과 연계한 소호-죽림 도로 개설 등 내부순환도로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준비, 교통 정체 구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지구와 죽림1지구, 만흥지구 택지 개발은 수

자 중심 맞춤형 택지로 조성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유관 기관과 연계한 고강도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척수 손상과 소아 재활 전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올해 착공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나선다.

돌산 지역 갯바위·산림 훼손 등 난개발 우려와 걱정에 대해 훼손된 자연 복구와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돌산지역 개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권 시장은 “2023년은 여수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참여 추진위를 구성해 미래 100년 대계를 차근 차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전 시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선불카드로 지급, 65세 이상은 현금 지급 설 명절 마지막 고비, 이동 멈춤 당부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권 시장은 이날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올해 들어 점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4분기가 시민들께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보답하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

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에 따르면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시민 1인당 25만 원으로 720억 원 규모다.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용의 불편함을 감안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권 시장은 “소요 자원은 도로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시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 마련하겠다”면서 “시의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카드발행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고비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추석과 같이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이동 멈춤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여수시, 지역 화훼농가 돕기 꽃 사주기 운동

‘사랑의 플라워 데이’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추진

여수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학교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꽃 수요가 급감하면서 평년에 비해 1/3 가격으로 출하되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해 2월 말까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운동을 전개한다.

관내에서 재배한 안개꽃과 알스트로메리아꽃을 시정 직원과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꽃 사주기를 추

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 산하 부서와 농협, 유관기관에서는 매주 수요일까지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이틀 후 금요일에 해당기관으로 직접 배송해 준다.

윤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판매부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 참여



권오봉 여수시장은 21일 오후 시장실에서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민주노동 여수지부 최관식 지부장과 서이철 사무국장, 전국택배노조 여수지회 육동주 지회장과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 강금주 지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과 캠페인 참여자들은 ‘늦어도 괜찮아’, ‘택배기사님 덕분에’, ‘택배기사님 힘내세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동참해요’,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홍보물을 들고 택배 노동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와 설 명절 때문에 택배 주문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택배 기사님께서는 안전과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여수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여수시, 청년취업자 83명에 월 10만원씩 주거비 지원

여수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83명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당초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

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꿈을 향해 더욱邁進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홍보에 힘쓰겠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여순사건 홍보단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

## 코로나19로 국회 출입 제한, 소수정예홍보단 6명 구성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촉구 활동 전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순사건 홍보단'이 구성됐다. <사진>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회 출입제한에 따라 6명의 홍보단을 꾸려 국회 방문 등 전략적인 촉구 활동을 시작했다. 여순사건 홍보단은 여순사건 유족회가 있는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 중 여수시

가 최초로 꾸려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계획했던 국회 앞 결의대회나 토론회 등이 어려워지자, 국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의 소수의 필수 인원으로 '여순사건 홍보단'을 구성해 특별법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홍보단은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과 김병호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 여순사건 담당 부서인 시청 총무과 행정팀장과 주무관, 여수시의회 민덕희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과 기획행정 전문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여수시와 유족회 등 민간단체, 시의회가 참여했다.

홍보단은 첫 활동으로 지난 19일 여수 지역구 주철현, 김희재 의원 등 국회의원 300명 전체 의원실을 방문해 권오봉 여수시장 친필 서한문과 여순사건 홍보영상, 동백 배지, 동백 시계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 지지를 부탁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지역민의 아픔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국회의원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 여수시,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업무 협약 체결

## 8개 수행기관과 통합복지서비스 업무협약

여수시는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19일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사회복지관(쌍봉·소라·문수·미평), 노인복지관(여수, 동여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관문 역할, 읍면동

과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올해는 11억 6400여만 원을 들여 ▲사례관리(위기가구 발굴, 관리, 서비스 연계) ▲마을복지(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재가복지(맞춤형 영양반찬, 재가서비스) ▲건강지원(병원 치료 동행서비스, 전문의료 지원·연계) 등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지역을 작년 10개 읍면동에서 2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 또한 노인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등 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사회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역 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수행기관 8개소에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복지와 건강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방문건강상담 등도 추진한다.

권오봉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자리잡아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여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출범'

## (사)상생나무와 민간위탁 협약식...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교육·상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여수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가 2월부터 출범한다.

시는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상생

나무'(이사장 박종두)를 선정하고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민간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상생나무는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를 맡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공정무역에 관한 사업 시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 진입 희망 법인 등에게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경영지원과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출범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춰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사회적기업 22개, 마을기업 28개, 자활기업 8개소가 운영 중으로 통합지원센터는 3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완공되면 신축건물 2층으로 이전해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 권오봉 시장 등 남해안·남중권 시장·군수 10명, 정세균 총리 면담 COP28 유치 등 주요 현안 건의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8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시장·군수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갖고 COP28 등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사진>

권 시장은 정 총리를 만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와 관련해 국내 개최도시를 우선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개최도시 공모 선정 시 남해안남중권 동서통합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 시민사회 참여 의지 등 다른 타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점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는 198개 회원(196개국, EU, 교황청) 총 2만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

라 2023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화동, 산청)이 힘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발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에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 실천해 온 여수는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통해 동서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문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 여수시 농수특산물, 우체국 쇼핑몰서 15% 할인판매

여수시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수특산물 업체를 위해 온라인 판촉 지원에 나섰다

여수시는 2월 14일까지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을 통해 여수시 농수특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에게 전품목 15% 할인 쿠폰을 지급해 여수의 농수특산물인 돌산갓김치, 간장돌계장, 손두부, 거문도해풍숙떡, 고등어살, 건어물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연말까지 수시 기획전 등을 진행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매출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청정 여수의 우수한 농수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몰 여수시 브랜드관은 여수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팝업존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여수시 새해 예산 1조3291억 확정 ...시의회 62억 삭감

##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 총 40건 안건 처리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사진)는 새해 여수시 예산의 승인요청액 가운데 62억 원이 삭감된 1조 3291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달 20일 여수시의회는 지난달부터 38일만에 걸쳐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한 제20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돌산 소

미산 불법 훼손과 관련해 촉발된 돌산지역 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새해 1월부터 3개월간 진행키로 했다. 조사위는 나현수 위원장 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돌산지역 개발행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특위는 김영규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 이선호 의원, 이상우 의원, 이찬기 의원, 고희권 의원, 정광지 의원을 구성원으로 내년 10월까지 활동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건 8건 등이었다. 조례안의 경우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 여수시의회, 동백꽃시계 전체 국회의원에 전달

## 19일 국회서 여순사건 법안통과 필요성 홍보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여수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동백꽃시계가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19일 민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300여 국회의원실에 동백꽃시계를 전달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김병호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장,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여수시정부 공무원 등도 동참했다.

민덕희 위원장 등은 우선 주철현, 김희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 차원의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위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을 하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300여 전체 의원실을 돌며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시계와 여순사건 배지, 홍보물, 여수시장 서한문 등을 배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발의 후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발의 이후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모든 여수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3월 국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홍보활동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수시의회 난개발조사위, 개발행위 점검

## 21일 토목건축 전문가 등과 소미산 일대 중점 확인

'제2의 소미산'을 막기 위해 구성된 여수시의회 난개발 조사위원회가 돌산지역 해안가 불법훼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21일 토목·건축분야 전문가, 시정부 공무원 등 18명과 함께 행정선을 타고 돌산지역 해안가 개발행위 현장을 둘러봤다.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는 행정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난개발로 문제가 된 소미산, 예술랜드 일대와 평사리 지장대사 인근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돌산지역 52곳의 개발행위 현장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이 논란이 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3개월이며 나현수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 김영규·강재현·송하진·송재항·주재현·주중섭·정광지 의원 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한다.

나현수 위원장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다면 소미산 불법훼손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며 "더 이상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의회 공공기관 유치특위 도의원과 간담회

##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 유치 협력 논의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수시의회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가 전남도의회와 간담회를 하며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김영규 위원장과 권석환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도의회 최무경·강문성·이광일·민병대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구성취지와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위 구성취지에 공감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환경부가 신규 환경정보다는 출장소 설치 등을 고려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여수시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응원도 있었다.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산단 등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환경관리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목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김영규, 권석환, 이선호, 이상우, 이찬기, 고희권, 정광지 의원 등 8명이 활동한다.

김영규 위원장은 "전남 동부권에는 여수산단과 항만, 발전시설 등이 밀집돼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 2021 코로나 극복 원년 함께 이겨냅시다

# 여수시의회, 설 재난지원금 지급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25일 상임위·예결특위 거쳐 본회의 당일 의결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25일 제207회 임시회를 열어 여수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이 모두 당일 처리된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8일 시정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자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5일로 서둘러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715억 원 상당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2212억 원에서 715억 원이 증액된 1조29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없었던 점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지급이 늦은 점 등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방역수칙에 잘 따라주시고 힘든 상황을 버티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18일 오후 영상 브리핑을 통해 "1/4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한다"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여수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만시지탄이나 환영"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줄기차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시의회가 주장이 관철돼 다행"이라며 "설 명절 전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이날 오후 브

리핑을 열어 모든 시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여수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시민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정희 도의원, 아동학대사건 대책 간담회



강정희 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6)은 지난달 1일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민병대 도의원,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동부해바라기센터, 여수시 관계자 등 12명이 모여 최근 발생한 '여수 여천동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과정 중 "친모가 보낸 강력한 사인들을 놓쳤다"며 사례관리 중 상담영역이 취약함을 지적하고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2주일이 지나야 학대아동이 분리조치 되는 등 대책마련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관계기관의 능가 대처를 지적했다.

박옥임(전 순천대 교수) 도의회의정자문위원은 "남겨진 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체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부모가정 지원시스템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체계 구축과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광일 도의원, "청소년 위기관리 전문시설 설치 시급"



이광일 도의원(여수1)은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와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 설치에 대해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

원 교육통계센터 조사 결과 중고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 시도율이 지난 2006년 이후 감소하다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자살 시도율은 중3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중고생이 39.9%에 달했다. 국민건강통계의 만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과 비교해 보면 성인은 20% 후반인 반면 청소년 인지율은

35%~46%에 달했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6년 46.5%로 정점을 찍고 2015년 35.4%까지 내려갔으나 2016년(37.5%)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겪는 위기학생들의 관리와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이 절실하다"며 전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순천의 마음키움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통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확산 설치돼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문성 도의원, "전남도 출연기관 청년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강문성 도의원(여수2)은 최근 열린 2021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출연기관에 지역 내 청년일자리

리를 보강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내 대학, 특성화고,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전남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조혁신센터, 바이오산업진흥원 등과 같은 도내 선도 출연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자

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도내 지역 대학, 특성화고와 전남도 출연기관이 MOU 협약 체결을 통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정보와 기술을 먼저 제공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 계획에 도움이

이어 "한 해 1만 명 정도의 청년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자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이 육성된다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기술, 시스템의 도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 학교와 출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학교, 특성화고교 등이 전남 동부권 산업단과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인구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민병대 도의원, '청렴지도자 공헌장' 수상



민병대 도의원(여수3)원이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로로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

자 공헌장'을 받았다.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는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UN국제단체연합 소속,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글로벌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회 청렴세상 조성에 공헌한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민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 기획행정위, 보건복지환경위에서 활동하

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도 도교육청의 예산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주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 받았다.

민 의원은 "청렴한 사회가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투명한 의정활동은 곧 국민의 행복한 삶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무경 도의원, 조세제한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최무경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16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

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 조세 부담이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의 과세 특례 요건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읍면도시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소유자의 경우 9억 원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예정 돼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병용 도의원, 밀알복지재단 감사패 수상

최병용 도의원(여수5)은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전남밀알복지재단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밀알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발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매년 지역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백두현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장학사업을 추진했고, 양로원·재활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

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사고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여수 화양·화정면 일대 안전책임기관인 119 안전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앞으로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